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중국

유동원 (국방대학교 교수)

현재의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2018년 4월, 6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배제된 중국은 북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중 양국은 3차례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상당 정도 회복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중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던 '차이나 패싱(중국소외론)' 가능성을 일축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중재자'로 역할을 강조해 온 중국이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서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예상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8.8.24) 발표자료

목 차

1. 들어가는 말: 한반도 안보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2. 북한태도 변화의 요인
3. 남북, 북미, 북중정상회담과 북중관계
 - 가.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의의
 - 나. 북중관계와 북중정상회담
4.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
5. 결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 5, 6월 3차례 중국을 방문,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상당 정도 회복됨

1. 들어가는 말: 한반도 안보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 현재의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음
 -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2018년 4월, 6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됨
 - 2017년 북한은 작년에만 15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도 한 차례 감행했으며, 북미 간 ‘분노와 화염’과 ‘괘 타격설’ 등을 북미 쌍방이 거론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됨
 -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7월에 독일에서 일명 ‘신(新)베를린 선언’을 발표
 - 한국이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권을 쥐고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했을 때, 국내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음
 - 북한은 2018년 이례적인 신년사를 발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어 한국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호응함
 -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10여 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됨
 - 2017년 ‘핵 단추’까지 언급하며 막말을 주고받았던 북미 정상이 2018년 6월 역사상 첫 회담을 했고, 후속 협상이 진행됨으로써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배제된 중국은 북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 의사를 표명
 -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 5, 6월 3차례 중국을 방문,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상당 정도 회복됨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중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차이나 패싱(중국소외론)’ 가능성을 일축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
 - 그동안 북핵문제에 대해 ‘중재자’로 역할을 강조해온 중국이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서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예상됨

- 이같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의의를 분석함과 동시에 북중정상회담이 북중관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임
- 먼저 북한 변화의 동인이 무엇인지(능동적 혹은 피동적 요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진행 중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는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론과 접근이 필요, 즉 기존의 강대국(구조) 중심의 이론에서 행위자 중심의 논리 필요
- 북한은 기존 강대국 중심(미중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적 행위자로서 행동하기를 희망함,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상호주관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해석이 가능

2. 북한태도 변화의 요인

- 북한의 태도 변화는 주로 능동적 요소에 근거함
 - 북한 태도의 변화를 피동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주로 외부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마지못해 대화와 협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논리임. 이는 대화국면의 시도가 시간벌기이고 국면전환으로 여겨짐
 - 북한의 태도 변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북한이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생각함. 즉 북한이 자신의 몸값을 높여(핵을 통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을 디딤돌로 활용
-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정은 철저하게 중국모델(兩彈一星)을 학습하고 실천
 - 중국은 1964년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고 이어서 1967년 수소탄 실험을 완성하고 1970년에 인공위성 발사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소위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을 완성
 - 이를 토대로 중국은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1971년 UN에 가입하였고,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 79년 미중수교를 성사시킴
-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 기간을 경험하면서, 1994~2004년 경제발전 추진
 - 1991년 나진, 선봉 특구를 추진하였고, 1996년 신의주, 남포, 원산 보세 가공구를 설치하여 미, 일에 개방할 것을 계획함
 - 2002년 경제개선 조치와 7.1조치(북한식 개혁개방)를 통해, 전면적 개혁, 시장경제 도입을 추진

북한의 태도 변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북한이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생각함

- 상기의 특구와 경제개선 조치에 필요한 자금은 중국과 일본(북일수교)에 기대
* 2000년과 2004년 김정일 중국 방문을 통해 경제지원을 요청했지만, 성과가 없었음

- 경제개발 계획이 실패하자 북한은 2005년 이후 경제개발보다 핵개발에 집중, 핵강대국 지위 획득을 통해 미국과 직접 담판 시도
 - 과거의 북미접촉은 양자, 다자(6자회담), 중국을 통한 접근, 북미 직접 대화가 비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 하지만 북미 직접 대화는 과거 경험상 미국과 전략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 배치" 선언. 핵무력 완성의 기정사실화

- 중국모델에 따라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추진
 - 2012년 3월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 2013년 핵, 경제 병진노선 선포 이후 먼저 핵, 미사일 고도화 추진. 특히 2016년과 2017년 집중적으로 핵(4, 5, 6차)과 미사일 실험
 -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선언. 핵무력 완성의 기정사실화
- 핵무력 완성 선언은 객관화가 어려운 자기 주장적, 선언적 내용(상호주관적): 주관적 생각이 다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대(공유된 지식) 형성. 트럼프와 김정은의 주관이 만나서 신뢰구축을 통해 공감대 형성
 - 핵무력 완성이라는 대미협상의 확실한 카드를 가졌다는 자신감으로 대미 협상을 대등하게 추진
-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사전조치로 핵실험과 ICBM의 실험 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하였고, 동시에 병진노선의 종결과 향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선포
 - 이는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수정을 의미하며,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의 개혁개방노선 선포를 연상하게 함
 - 북한은 2018년에 접어들면서 정권생존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전략 중점을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전체 방향은 체제보장을 넘어서 북한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이를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성장하기를 희망함
 - 하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경험, 국외자본의 투자 유치가 필수적임. 이는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가능하며, 이 점에서 비핵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3. 남북, 북미, 북중정상회담과 북중관계

가.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의의

○ 판문점 선언의 의의

- 동 선언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합의함
- 가장 중요한 것은 강대국 중심의 냉전 구조에서 벗어나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임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동북아 안보질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임(Game Changer)
- 완전한 비핵화 확인, 구체적 추진 내용은 북미회담에서 논의
- 종전선언의 연내 실시, 정상회담의 정례화

○ 북미정상회담의 의의

- 북한 비핵화의 주체가 미국으로서, 미국이 직접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과거 중국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실패를 인정
- 합의문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CVID)’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핵폐기 검증은 과거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요구했던 정치적 수사로서,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목표를 제시한 것임
- 따라서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여 양국이 구체적 사항에 대해 실무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함. 즉 이후 북미 간 실무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내용과 시한 제시가 필요
- 비핵화 우선 조치: 북핵 동결과 불능화, IAEA 복귀, ICBM 폐기
- 핵무기 폐기 시한 2년: 핵물질 신고, 사찰, 검증
- 비핵화 대가: 전략자산 철수, 훈련중지, 공격 포기, 평화협정, 북미수교
- 우선 조치: 1년 내 연락사무소 설치, 제재완화와 경제지원
- 현재 미국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과거 사례(2010년) 연구

합의문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CVID)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핵폐기 검증은 과거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요구했던 정치적 수사로서,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목표를 제시한 것임

나. 북중관계와 북중정상회담

-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함.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 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안정이 비핵화보다 우선순위가 됨
- 이를 위해 남북한 균형외교를 견지하며, 시진핑 집권 이후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

중국의 대북정책은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군부와 당, 일반 국가 관계로 보는 외교부가 관장하며, 주류는 공산당의 입장으로, 여전히 북한과 특수관계(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

-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초부터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않음
- 중국의 대북정책은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군부와 당, 일반 국가 관계로 보는 외교부가 관장하며, 주류는 공산당의 입장으로, 여전히 북한과 특수관계(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
 - 3차(2013.2)와 6차(2017.9) 북핵실험을 전후해 이후 중국 국내 대규모 북한 정책논쟁(자산론, 부담론)이 있었으며, 부담론의 전문기는 북한 포기 혹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무기 처리 등을 주장
 -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대부분 대외용 메시지에 불과, 미국과 한국을 의식한 의도적 움직임으로 보임
 - 논쟁과 상관없이 중국은 특수관계를 기본으로 대북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시진핑 등 지도부가 강한 메시지를 전달
 - 이는 한반도 안정이라는 목표하에서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
 - 특히 외교부는 3차 북핵실험 직후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국가관계라고 표현
- 북중관계는 시진핑 집권 이후 지속해서 냉각된 가운데 경제교류 유지
 -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과 12월 중국과의 협력 채널인 장성택 처형 등으로 소원해졌고, 이후 냉기류는 2017년까지 유지됨. 시진핑 주석의 김정은에 대한 불신감을 유지하지만, 경제관계는 지속
-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의 역할을 인정. 이후 미일동맹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회복이 필요
 - 중국은 감정적으로 불쾌하고 북한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동아시아 안보 구조를 고려, 관계 유지와 회복이 필요
 - 미일동맹의 강화로 인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짐. 그 주요 대상이 중국으로, 미일동맹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으로 파악
 - 따라서 미국의 동맹 중심의 동아시아 전략이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한의 포기과 같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중국은 북한에 대해 장기적인 북한포용/관리정책을 채택하여 시행 중임. 즉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여, 북핵문제는 장기적 문제로 접근하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압박 및 경고를 보내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
 - 2011년 이후 정치적 관계 악화에도 경제적 관계는 지속하였고, 2014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90.2%에서 2017년 94.8%로 증가함

- 2018년 남북, 북미협상과정에서 소위 '차이나 패싱'(중국소외론)이 제기되자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 2018년 3, 5, 6월 3차례 정상회담이 성사됨
 - 중국이 북한에 강력하게 요청,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북미 간 급속한 비핵화 진전으로 인해 북한이 친미(親美)화 될 가능성 저지
 - 둘째,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회복
 - 셋째, 이를 토대로 북핵 협상 과정에 개입하여 중국의 입장, 이익을 반영
 - 결국, 중국은 강대국의 정치와 지정학적 맥락에서 북한을 과거의 북중관계의 틀, 즉 경제지원을 토대로 북한의 후견인으로서 중국이 주도하여 북한을 관리하는 양자관계로 회복을 시도

- 북한은 기존 강대국 중심(미중 구조)의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 행위자로서 행동하기를 희망함. 따라서 이전처럼 중국 의존에서 탈피하여 미국과 직접 접촉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
 - 미국과 전략균형을 이룬 핵 강대국으로서 동등한 관계에서 북중관계 재설정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지원이 필요
 - 따라서 북한은 북중정상회담을 수용하여 이를 통해 북핵 협상에 중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최소한의 안전판(보험)을 마련하고 또한 경제지원의 후원자 확보 가능. 특히 북한의 비핵화 원칙인 단계적 동시적 방식의 든든한 지원자(중국)를 확보하여 이를 미국과 협상에 이용
 - 북한은 경제집중노선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대북 제재 완화를 희망, 제재완화가 어려우면 중국으로부터 경협을 추진

-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북한이 친미화되거나, 협상이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임
 - 특히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김정은이 예년 수준의 한미군사훈련은 허용한다고 했을 때, 중국은 이를 쌍중단(북한 핵실험중단/한미 군사훈련 중지) 원칙의 훼손으로 파악
 - 1차 북중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하였고(석유공급 중단 가능성도 언급), 1차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청
 - 이에 대해 북한은 대규모의 경협(이전에 추진하다 중단된 국경 지역 특구 개발계획)을 중국에 요청
 - 2차 북중정상회담은 1차와 달리 북한의 요청으로 성사됨. 당시 일본과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김정은이 예년 수준의 한미군사훈련은 허용한다고 했을 때, 중국은 이를 쌍중단(북한 핵실험중단/한미 군사훈련 중지) 원칙의 훼손으로 파악

**3차 북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세 가지 변하지
않은 것(三個不變)
을 약속하면서 국제정
세의 변화에도 북중관
계는 변하지 않을 것을
천명**

- 강경파인 존 볼턴이 개입하여 비핵화 협상의 조건(중거리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협상의 의제화)을 강화, 이에 북한과 중국은 서로 한미 군사훈련 중지와 대북한 경협을 언급
- 그리고 중국은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친미화를 경계하면서 북한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속도 조절도 요구
 - 이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선언으로 나타남
 - 3차 북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세 가지 변하지 않은 것(三個不變)'을 약속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북중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을 천명
- 결국, 북중정상회담의 성사와 그에 따른 양국관계의 회복 시도는 양국 간 전략적 이익이 작용한 것으로 3번의 만남으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실정임
-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6년간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정상 간 교류가 없을 정도로 양국관계는 냉각
 - 이제 북한이 직접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북핵 협상과 관계개선을 시도하면서 중국은 소위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여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
 - 북한은 여전히 중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함

4.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

- 한반도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은 제1차 북핵위기 시 '불개입정책'에서 제2차 북핵위기 이후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변화됨
- 중국의 북핵 관련 3원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
 - 그러나 중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 환경 안정의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강제적인 해결을 바라지는 않음
- 1993년 1차 북핵위기 이후 중국은 북핵문제는 북미 양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을 강조. 중국은 동 문제에서 '방관자'로서 불개입정책을 천명
-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에 대해 장쩌민은 "양자 간 직접 대화와 협상이 북핵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강조

- 당시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시도를 자위권 차원에서 인식하고, 북핵 문제의 심각성이나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
-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이 기존의 '방관자'적 입장에서 '중재자'로서 적극 개입을 천명함
 - 2차 북핵 위기 발생 초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2003년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이 예상되자 중국은 이를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적극적 해결에 나섬
 - 2003년 8월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 개입 시도
 - 이는 당시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과 연관이 있음.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방식으로 클린턴 행정부가 택했던 양자회담의 방식을 거부하고 다자회담인 6자회담을 협상의 틀로 설정
 -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나쁜 행동에 대해 미국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강경한 원칙을 세우고 북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움
- 2009년 3월 북한이 6자회담 탈퇴 선언 이후,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
 - 6자회담이 북한의 탈퇴로 동력을 상실하게 되자,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하면서도, 대북제재가 목적이 아니며 북한의 체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제재나 무력 사용은 반대
 - 중국은 ‘북핵문제’를 ‘북한문제’와 분리, ‘북한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즉 핵문제 해결은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미 간 대화를 권장하지만, 중국을 배제한 북미 간 직접 접촉은 경계함
 - 2016년 3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병행하는 ‘쌍궤병행’ 방안을 제시. 이어서 중국은 이른바 ‘쌍중단’, 즉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주장하여, 북핵문제의 ‘적극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강조
- 2018년 남북, 북미 북핵 협상 과정에서 ‘중국소외론’이 제기되자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문제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강조
 - 2016년 9월과 2017년 9월 중국 외교부는 “북핵문제는 북미 모순이 실질적 원인으로 미국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부

2009년 3월 북한이 6자회담 탈퇴 선언 이후,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

- 2018년 4월과 6월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자, 정전협정의 체결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구축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강조
-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그간 유지해온 ‘중재자’ 역할에서 ‘당사자’로의 전환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차이나 패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임
- 이를 위해 중국은 그동안 견지해온 ‘쌍중단’과 ‘쌍궤병행’ 원칙이 북핵 협상 과정에 적용이 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북미협상의 급속한 진전으로 ‘북한의 친미화’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협상의 속도조절을 요구함

5. 결론

-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는 당사자인 남·북·미의 사고의 전환에 기인함. 하지만 중국이 뒤늦게 협상 과정에 개입을 시도하여 문제가 더욱 복잡해짐
 - 그간의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남북이 비핵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미국은 해결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성사됨
 - 북한은 한·미·중 사이 균형자로서 중국 의존에서 탈피, 미국과 직접 접촉
 -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 확보를 통해 미국의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
 - 중국은 당초 북핵 협상에서 소외되었으나, 이후 중국의 강력한 개입 의사를 표명하여 북중정상회담을 성사하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함
- 중국의 이러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긍정적 요소로서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하여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중국은 정전협정의 체결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구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정전협정의 체결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임
 -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중국은 북핵문제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전환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요구함

중국은 정전협정의 체결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구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

-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라는 역할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핵 협상을 통한 '한미 주도의 현상변경' 혹은 '북한의 친미화' 저지라고 하면, 중국은 북핵 해결의 방해꾼으로 비칠 수 있음
 - 이는 최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핵 협상의 구체적 성과가 미진한 가운데 그 책임에 대한 공방으로, 중국 배후설이 제기되는 근거이기도 함
 - 이는 또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온 협력, 공생, 신뢰에 기초한 신형대국 관계와 인류공동체 구상과도 배치됨
 - 최근 북미협상의 교착에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만약 협상이 어려워져 북한의 비핵화가 여의치 않을 때, 동북아 안보상황은 중국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과거처럼 북한과 북핵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당면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함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라는 역할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핵 협상을 통한 '한미 주도의 현상변경' 혹은 '북한의 친미화' 저지라고 하면, 중국은 북핵 해결의 방해꾼으로 비칠 수 있음

❖ 저자 약력

■ 유동원

現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자 산학협력단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만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를 취득함.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등을 역임함.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대외관계와 국제정치이론이며, 주요 논문으로 “중국의 강대국 역할: 형성, 특징과 영향요인”(2018), “역할이론의 발전과 국제관계 발전: 주요 개념과 구성주의”(2017),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정책 분석: 역할이론을 중심으로”(2017),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 변화”(2015) 등 다수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편집: 황지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